

낙농경영 안정 위해서라도 낙농제도 개선 시급



조 석 진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0년 여름의 이상고온에 따른 유량감소, 번식장애 및 최근의 구제역발생까지 겹쳐 낙농의 생산자원인 경산우가 수난에 직면함에 따라 전례 없는 원유공급부족현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12월 17일, 국제곡물시장의 옥수수가격이 과거 최고를 기록했던 2008년 7월의 톤당 294달러의 80%에 달하는 235달러를 넘어섰다. 그 외 대두박, 밀, 원유(原油) 등 투입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2008년의 20.5%에 달하는 유대인상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낙농가의 소득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시유의 소비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의 우유생산비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규모확대를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원유생산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다시 공쿼터발생과 쿼터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자산가치의 하락을 초래해 낙농가의 경영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2011년 7월과 2012년 1월로 예정된 한·EU,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국내 낙농은 그야말로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인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가 직면한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낙농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 결과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후계자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1년 내내 단 하루도 쉴 수 없다는 이른바 낙농만이 지니는 '노동의 연중구속성'으로 인해 아무리 원유가격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젊은 노동력의 신규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뿐 아니라 낙농가의 대부분이 도시근교에 입지하고 있는 국내 낙농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도·농혼축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화로 신규로 낙농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기존 낙농가의 규모확대조차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국내 낙농이 직면한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경우 금후 낙농의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원유의 수급불안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결과 원유무역이 가능한 일본, 중국과의 FTA까지 가시권 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후 자칫 시유의 수입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낙농이 직면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전국단위 쿼터제의 조기 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최근과 같은 원유의 수급불안정 하에서도 지역 및 집유주체에 따라 수급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전국에 걸친 원유의 전수배조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대책의 적기 실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급조절 및 효율적인 정책운용을 위해서도 전국단위 쿼터제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낙농이 지니는 산업적 특성 및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낙농가의 소득안정대책이다. FTA 하에서 저가의 유제품수입증가가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장·단기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후 FTA 발효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불확실요인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낙농가의 폐업이 늘어나 자칫 원유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상환시기 연장 및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낙농가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유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유생산에 국한된 국내 낙농에 있어서 시유의 소비정체는 곧 낙농생산기반의 축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시유소비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



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국산치즈생산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낙농선진국과의 FTA 발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최근 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유제품이 치즈이며, 그 가운데서도 자연치즈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진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치즈의 국산화 비율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제품 순수입국인 일본의 2009년 현재 가공치즈 및 전체치즈의 자급율은 각각 28.9%와 19.1%이다. 이처럼 일본의 치즈자급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가공원료유에 대한 부족지불제도 및 국산치즈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국내에서도 국산치즈 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끝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제화의 흐름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EU,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다. 그뿐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가장 강한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또한 임박해 있으며, 결국에는 시유무역이 가능한 일본, 중국과의 FTA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능가는 물론, 정책담당자까지도 이 같은 낙농대국과의 FTA의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최근 한국이 낙농대국들과 거침없이 FTA 협상을 타결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낙농관계자들이 한국 낙농의 미래에 대해 필자에게 직접 우려를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미국, EU와의 FTA가 유제품 순수입국인 한국 및 일본 낙농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생산자, 유업체는 물론 정책담당자를 포함하는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는 금후 임박한 FTA 체제 하에서 국내 낙농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성실한 역할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

